

## 시론



남성욱

- 현)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김정은 ‘기-승-전-核’과 文대통령 미망(迷妄)

평양이 엄동설한에 대규모 집합 정치행사를 개최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급선무인 시점에 7000여 명이 노 마스크로 4·25문화회관이라는 대강당에 모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연 것이다. 정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전대미문의 행사다. 제8차대회 기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참석자들이 대회 7일차부터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돌연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이 착석하면 마스크를 벗고 반대로 김정은이 이석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특이한 행태를 보였다. 김정은은 집권 10년차에 셀프 대관식으로 ‘당총비서’에 추대돼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김일성의 ‘국가주석’ 직함을 제외하곤 모든 직위를 장악해 유일 영도집권체제의 서막을 예고했다. 제7차당대회까지 대회장 무대 정면에 크게 걸려 있던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이번 대회에서 사라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선대의 수준으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이제 독자적인 노선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북한 인민을 장악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김정은의 총비서 추대를 축하하는 전문을 보냈다.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

다.”고 이례적으로 목표달성 실패를 자인했다. 특히 ‘사상초유의 보건위기’ ‘첩첩난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지난해 8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 실패를 공식화했다. 2016년 제7차당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라고 호기를 부렸던 5개년전략은 공염불이 됐다. 유엔의 대북제재, 수해와 코로나19 등 3중고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이 지도자를 백기 투항하게 만들었다. 인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자력갱생 전략이 겨우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과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물샐틈없는 그물망 유엔대북제재 하에서 외부와의 교역이 불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여의치 않는 만큼 내부의 자원과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고육지책의 자력갱생 전술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당대회에서 천명한 대외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는 평양’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제8차당대회의 전반전이 경제분야 라면 후반전은 국방과 대외관계였다. 전반전은 수세적 차원에서 경제실패를 자인했으나 후반전은 갑자기 공세적인 ‘닥공’ 분위기로 급반전하였다. 김정은은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과거 2016년 제7차당대회 때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2017년 화성-15형 등 수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뒤 핵 보유를 선언했었다. 새로운 대미·대남 정책은 내놓지 않고 ‘마이웨이’식의 군비증강을 예고하였다. 5년 만에 노동당규약을 개정

해 아예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을 앞당긴다고 명시하여 1970년대 대남적화통일 노선으로 회귀했다. 과거 핵개발이 자위적인 전쟁억지력 차원이란 주장을 넘어선 공격적인 표현이다. 김정은의 ‘사업총화’에는 ‘핵(核)’이 36번, 핵무력이란 단어도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동북아 군비경쟁의 ‘게임체인저’라는 핵잠수함, 극초음속 탄두와 다탄두 고체연료 ICBM 등 대미용 3개와 전술핵무기 등 대남용 3개 등 6대 신무기를 언급했다. 2019년 2월 하노이노딜 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본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체제수호를 위해 국방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셈이다. 국방력강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경제실패를 만회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그는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대미·대남정책을 내놓지 않고 미국과 남한정부의 행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그는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미강경정책의 고수를 강조했다.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신임대통령을 겨냥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하였다.

김정은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면서 각종 첨단무기 강화 계획도 세세하게 공개했

다. 그것도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단계 및 방법 등을 장황하게 밝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미국을 겨냥한 압박 정책의 일환이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이란 등 관련국가들과의 연대 계획까지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에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으며 1만5천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도 밝혔다. 아울러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탄두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등장도 예고하였다. 그럼에도 스스로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자처하며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핵무력의 집중 언급은 미국과의 핵군축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핵무기 고도화와 핵무력 증강계획을 자세히 밝힌 것은 핵보유국 지정사실화를 넘어 핵군축 프레임을 만들어 향후협상을 북한식 핵군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기저에 깔고 있다.

남측을 향해서는 무력증강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정부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시했던 코로나 방역협력은 일거에 거부됐다.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남조선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

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열어뒀다.

요컨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협력 등에는 선을 긋고 금강산의 남측시설 철거도 재차 강조해 남북관계의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은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 계획’을 새로운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독자적인 금강산개발계획을 밝혔고, 해금강호텔 등 남측이 운영하던 시설들은 ‘모두 들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9년에도 시설철거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당대회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온정각, 이산가족면회소, 문화회관 등 현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시설들이 남아 있다. 사실상 개성공단에 이어 남북경협의원조 격인 금강산관광 조차 흔적을 지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미국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남북관계 반전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실제 반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관건은 오는 3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

미연합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2018년 이후 연합훈련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지만, 북한은 조 바이든 정부출범을 앞두고 남측에 완전 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신축년 정초 평양에서 혹시나 코로나 시대에 전향적인 입장을 선보일까 기대했으나 역시나로 종결되었다. 최고지도자가 경제 실패를 자인했으면 군사비를 경제개발에 투입하고 개혁·개방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통치자가 핵보유국을 공식화하며 인민들의 삶을 꺾박한다면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재뿐이다. 올해로 김정은 집권 10년차가 되었지만 인민들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 평양의 최고지도자는 장황하게 신기술 핵개발전략을 과시하여 온건한 노선을 기대하던 정부당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미국의 신정부출범에 발맞춰 북미대화과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문대통령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남북·북미관계 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 보다는 ‘대화축구’ 기조만 유지하였다. 일단 구체적인 대화 제안보다는 물밑에서 7월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대화관 만들기 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출범과 3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조율하면서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다. 일부 여권인사들은 김정은

의 서울답방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김정은이 서울답방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난 4년간 일편단심으로 추진된 문 정부의 평양 바라보기 정책도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 김정은은 “2017년 11월 대사변(ICBM급 화성-15호 발사)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해 새로운 승리를 쟁취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기만당한 것인지 목인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핵무력’ 운운 등의 흘러간 노래만 고집하는 평양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 비핵화 쇼였다는 판문점선언 등으로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로 남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미 형해화된 9·19 군사합의만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김정은은 코로나 방역협력, 개별관광 및 인도주의 협력 등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폄하하였다. 과연 북한이 판단하는 남북한 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김정은의 북한이 근본적인 ‘체제이익(regime interest)’을 포기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코로나중식을 기대하는 봄이 오고 있지만 동북아국제정치에서 한반도는 여전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아무리 선의의 대북정책을 내놔도 ‘변하지 않는 최고지도자’에 대해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미망(迷妄)이다. 혹한기 심야 열병식과 함께 ‘기-승-전-核’으로 마무리된 평양의 제8차당대회가 서울에 주는 메시지다.